

원인 못 밝힌 서창동 침수피해…답답한 주민들

서구청 “수문 작동 안돼” vs 익산국토청 “조치 안한 서구청 탓” 공방 속
영산강 배수통문 오작동 원인 밝힐 시연회, 익산청 불참으로 결국 취소
행정기관 책임 떠넘기기 실망 속 “호우 또 오면 어떡하나” 불안감 가득

지난 여름, 서창동 일대는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다.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고 주택·상가가 침수됐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마을로 유입되는 영산강 배수통문을 닫아 달라고 행정당국에 요청했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닫히지 않았다. 자동으로 닫는 기능도 작동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수동으로도 닫히지 않았다. 강제로 문을 닫는 시도조차 불가능했다는 게 서구 조사 결과다.

집중호우에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는 수문이 닫히지 않으면서 농경지 및 농작물 침수 389건, 주택 15건, 상가 25건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서창동 일대 주민들은 왜 배수통문이 닫히지 않았는지 여태껏 알지 못한다. 배수통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맡은 서구는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닫히지 않았다”면서 관리 책임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원인 규명까지 해야 한다고 책임을 미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역류할 때까지 배수통문을 닫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서구청에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뒤 원인 규명을 당부했음에도 그대로다.

누가 잘못했는지, 왜 배수통문이 작동되지 않았

는지 알아야 책임 여부를 따질텐데 정확히 가려진 게 없다보니 주민들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보니 그만큼의 비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주민들의 하소연을 접한 일부 배수통문 설치업체가 서구에 제안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갖춰놓고 배수통문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작동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직접 시연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서구는 주민들 요구를 수렴, 23일 오전 11시 해당 장소에서 시연회를 하기로 했었다. 배수통문 관리주체인 익산청에도 참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익산청은 그러나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배수통문 작동 여부를 시연할 업체가 배수통문 설치업체의 경쟁회사라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에게 진즉 원인 규명 조사를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으면서 피해 입은 주민들보다 작동조차 안된 배수통문 설치업체

입장만 쟁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만했다. 서구도 익산청이 오지 않으면 시연회를 취소했다. 오랜 의구심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했다.

주민들은 “왜,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배수통문이 작동이 안됐는지 궁금해하는 주민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정기관 멋대로 행사를 취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피해를 입은 건 우린데,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시설물의 오작동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연회를 자기를 멋대로 취소하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익산청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소극적이다. 익산청은 다만, “물이 역류하는 상태에서 강해진 수압으로 수문이 움직이지 않거나 수문 밑에 가득한 부유물로 닫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문설치업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에 검찰 불복…즉시 항고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이 이러한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씨측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체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아닌 채권추심 일인줄 알았다고?

재판부 “불법 행위 미필적 인식”…수금책 원심대로 징역 2년

“이 일 보이스피싱 아니었어?”,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사원으로 일하는 겁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근무 형태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인지를 물어봤는데,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업무로 답변해 그대로 믿었다면 사기죄를 물을 수 있었을까.

3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같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3006만원을 건네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5월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6680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전달하는 일을 했지만, 신용정보회사 추심사원으로 취직된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물어 확인했다. 단순한 채권추심업무에 불과하다고 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의심하고도, 3자가 아니라 범행을 지시한 사람에게만 확인하고 의심을 거뒀다는 점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 행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킨 사람에게 불법 아니냐고 물으면 누가 불법이라고 하겠느냐”면서 “당사자인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파견된 것처럼 행세하거나 소개한 점, 정식 면접도 없는 점,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등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5·18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전두환씨의 사자 명예훼손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공동 대응을 위한 긴급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재판 생중계를 허하라”

오월·시민단체 긴급회의 열고 촉구

전두환씨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5월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처벌본부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옛 전남도청 별관1층에서 전두환씨 형사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 및 선고 재판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의 세부 일정과 전두환 재판의 법정 생

중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가 전례가 없음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진상 규명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인데다, 전직 대통령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씨의 재판으로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날의 진실을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통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전씨 재판을 앞두고 광주지법 앞 1인

시위와 SNS를 통한 릴레이 홍보 방안도 구상중이다.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24일 오후 4시 광주시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전씨 재판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놓으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사제, 수도자, 신자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26일 전씨 재판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이며 유족회 회원들은 검은색 복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 당일 법원에서 엄정한 재판을 주문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

시민청문관 2명 채용

광주지방경찰청은 시민청문관 2명을 채용, 지방경찰청과 광산경찰서 청문감사 부서에 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시민청문관은 경찰조직 내부의 부패요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진행, 경찰관 청렴도 향상을 꾀한다.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듣고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부패 예방을 위해 풍속 사건 심의와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시민청문관 77명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해 77개 경찰관서에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추가 선발로 전국 274개 관서에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